

2021 광주민주포럼

GWANGJU DEMOCRACY FORUM 2021

한국 민주주의와 **공**공외교

International Democracy
and **Public** Diplomacy in South Korea



GWANGJU DEMOCRACY FORUM 2021 광주 민주 포럼

Democracy and Public Diplomacy in South Korea

「한국민주주의와 공공외교」

Day 4, 20th May 2021



Program:

좌 장

이 성 훈 / 경희대 미래문명원, 한국공공외교학회 소통위원회 위원장

발 제

김 태 환 /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공공외교학회 이사

민주주의와 공공외교: 문화적 보편성과 다양성의 맥락에서

송 진 호 / KOICA 전 상임이사 & 한국공공외교학회 이사

평화 · 인권 · 민주주의 공공외교 현황과 과제

토 론

김 찬 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국장 직무대리 (국제담당)

나 현 필 /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이 재 정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조 영 숙 / 양성평등 대외직명대사

아이한 카르디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공공외교학회 이사

민주주의와 공공외교

문화적 보편성과 다양성의 맥락에서

김태환
국립외교원



2021 광주민주포럼
민주주의와 공공외교

2021. 5. 20



WHAT IS TO BE DONE?

- 1 '문화적 보편성' vs.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민주주의
- 2 '가치의 진영화'와 공공외교
- 3 중도적 가치와 중견국 공공외교
- 4 한국 공공외교에 대한 함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문화적 보편성'과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조망



인종, 민족, 종교, 종파, 종족, 인권과 민주주의 문화, 문명...



특정 가치와 규범에 대한 이해와 의미는 문화 간 상이할 수 있으므로, 특정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상이한 문화 간 상이한 이해와 의미 존재



Cosmopolitan Universalism

- 문화적 다양성은 안정적 국제질서에 부정적 영향(e.g. Huntington). 통일된 문화적 맥락에서 국제질서가 형성 [Culturalists; Martin Wight]
- '국제법과 제도' 하에서 문화적 다양성, 다문화주의가 발현되면서 안정적 국제질서 유지 [Institutionalists; Liber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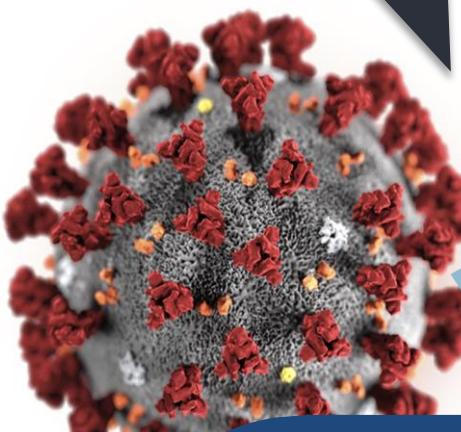
Communitarian Relativism

- 다양한 문화공동체를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자 의무로 인식 [Michael Waltzer, Charles Taylor]

'문화적 다양성'의 부상과 LIO의 퇴조?

"Liberal International Order"

의 위기, 퇴조?



Qs

민주주의의 퇴조

권위주의/스트롱맨
정치의 부상

부상하는 (non-Western)
국가들의 도전

중국, 러시아, 인도와 같은 부상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강조
['문명형 국가'론]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

(서구 국가들 내부 포함)
극우 포퓰리즘, nativism,
문명주의, 백인우월주의...

이슬람 국가(IS)와 같은 초국가적
집단들은 종교적 정체성 강조

물질적 힘의 배분의 변화
비물질적 가치규범 배분의 변화

국제질서의 재편???

- '문화 다양성'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문화 보편성'이 (공동의 문화로서) 국제질서 유지에 기여하는가?
- '인권'과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인가? 이에 대한 문화 간 '공유하는 이해와 의미 (shared understanding & meaning)'가 존재하는가? 가치에 대한 문화간 이해와 의미의 차이와 이를 반영하는 정치체제의 차이의 문제, 이로부터 생성되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WHAT IS TO BE DONE?

2

'가치의 진영화'와 공공외교



인권

민주주의

자유 시장

법의 지배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
(3,0573, WP)

“America Is
Back!”



“보통 국가”
(normal country)

역사 수정주의
“올바른 역사관,”
“역사적 자긍심 고취”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
“Democratic Security Diamond”
“Free & Open Indo-Pacific”

자유주의 가치외교로 표명!

헌법 수정주의

“적극적 평화주의
(proactive pacifism),”
“집단적 자위권”

샌프란시스코체제
수정주의

“군사적 역할 강화”

NEWSIS

중국 - 강대국 정체성: 중국 중심의 가치와 세계관

인류운명공동체



문명형 국가

CIVILIZATIONAL STATE

장웨이웨이(張維爲)

- 중국의 정체성은 5천년 이상 지속된 '문명'과 '근대 국가'를 융합하는 문명형 국가
- 서구와는 구별되는 중국의 독자적인 발전 방식("다른 근대")이 전 세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서국의 패도정치에 대해서 중국의 왕도정치 강조
- 중국몽
- 중국 특색 대국외교

천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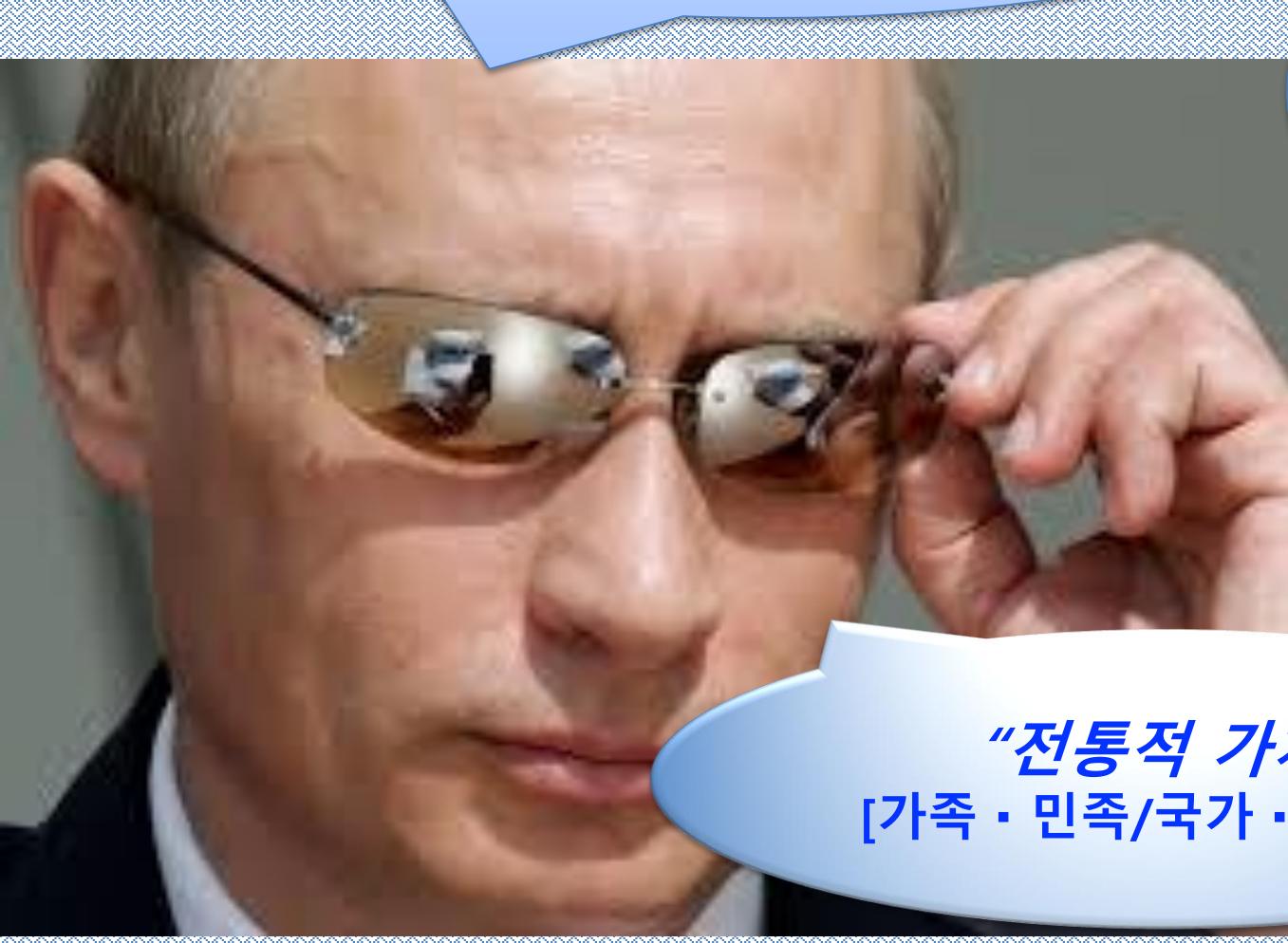
ALL UNDER HEAVEN

자오텅양(趙汀陽)

쉬지린(許紀霖)

깐춘송(干春松)

- "천하에는 밖이 없는 것(天下無外)"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타자'를 거부하지 않는 포용적 세계관 제시
- 지리, 민심 뿐만 아니라 세계 제도와 질서로서의 천하 개념
- 인종 및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는 문화와 가치체제를 강조함으로써 서구의 세계관과는 구별되는 공존의 존재론, 공존의 질서 강조
- 왕도에 근거한 본보기 정치의 중요성 강조
- 신형국제관계
- 인류 운명공동체
- 일대일로



“러시아의 전통적인 신앙과 핵무기는 러시아의 주권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

“정교회(Russian Orthodox Church)는 다른 국가에서의 종교와는 달리 러시아 국가성(Russian statehood)의 근원”

“전통적 가치”
[가족 · 민족/국가 · 기독교]

대안 문명으로서의
“유라시아주의”
Eurasi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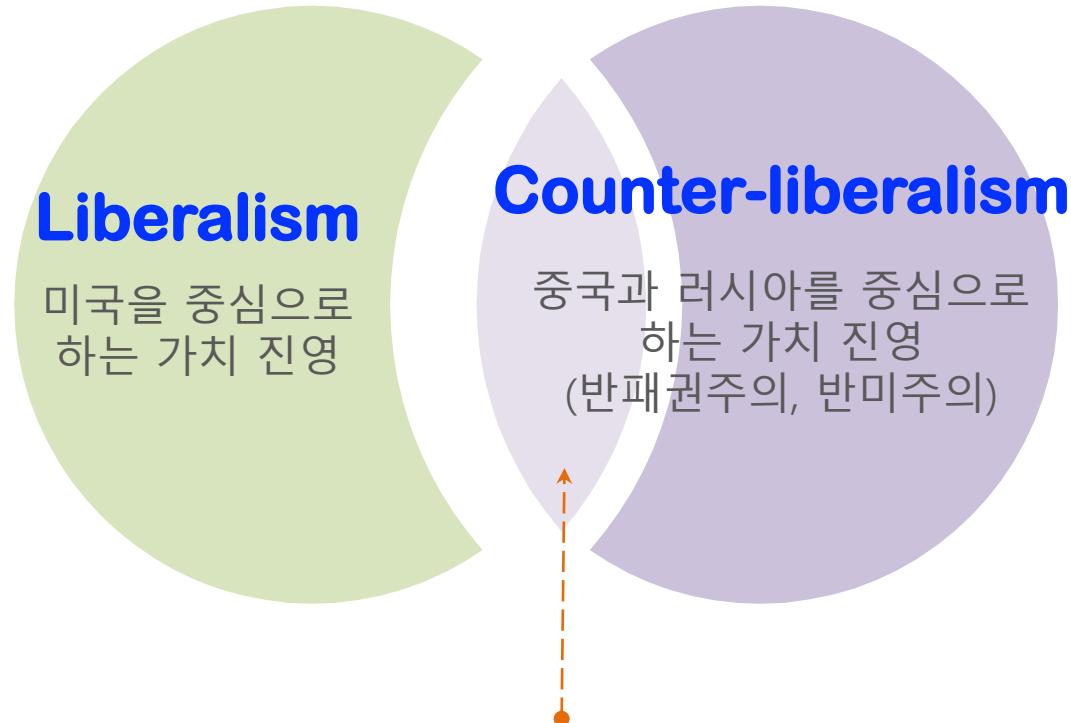
주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담론과 실천

	가치와 담론	지정학 전략	“우리”	“그들(타자)”
미국	자유주의 인권·민주주의	인도 · 태평양 전략	호주, 인도, 동맹 및 파트너들	중국과 러시아 (rival powers) 북한, 이란 (rogue regimes)
일본	“정상국가” (Normal state) 자유주의			중국 북한
중국	중국식 사회주의 전통 철학 사상 (문명형 국가 천하론)	일대일로(BRI)	“Community of shared destiny for mankind”	미국
러시아	러시아정교회에 기반을 둔 전통적 가치 · 유라시아주의	유라시아경제연합 (EAEU)	CIS and “natural allies”	미국과 서방 ("Atlanticism")

주장형 PD, 가치외교의 부상과 '가치의 진영화'(blocization of values)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

민족/국가는 물론, 인종, 지역, 문명, 종교, 종파에 근거한 배타적인 집단 정체성의 정치가 자유주의와는 상반된, 그리고 이에 대항하는 가치와 규범으로 표출



- 미국과 유럽에서 극우 민족주의 포퓰리즘의 부상
-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유주의 리더십의 쇠퇴
- 러시아의 유럽 국가 내 극우 또는 극좌 정치세력과의 연대("natural ally")

'분산된 대립'

(scattered confrontation)

가치의 진영화는 냉전기와 같이 공고화된 두 이념 진영 간 대립이라기보다는, 상이한 정체성에 따라서 대립과 갈등이 여러 전선에서 복합적으로 표출

미중 간 가치경쟁

국제질서의
재편?

공공외교가 '가치의 진영화'
의 선두에 설 것인가?

인권과 민주주의 에 대한 상이한 이해와 의미

LIO 수호

자유주의에
대한 도전

G. John Ikenberry

- "자유주의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안보와 복지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이자 프로젝트"
- 자유주의 패권국 또는 자유주의 국가집단의 콘소시엄이 위계적 국제질서의 규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국제질서 이론

중국(러시아)

자유주의 가치, 특히 개인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가치와 규범을 체제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간주



WHAT IS TO BE DONE?

3

중도적 가치와 중견국 공공외교

문화적 다양성 맥락에서 중도적 가치와 규범



중도적 가치로서의
‘인간안보’-‘적극적 평화’-‘SDGs’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들 간 '공유하는 이해와 의미'를 생성해 냄으로써
多样성을 다루는 과제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도 여전히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인정을 위한 도전과 투쟁'이 지속.
문화적 보편성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가치의 다양성, 그리고 이를 반영하는 정치체제의 다양성)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관리함으로써(govern),
포용적이고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느냐의 문제



국제정치의 두 가지 로직과 현 국제질서에 대한 비(非)강대국들의 입장



인간안보 분야 중견국 이니셔티브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UN 평화유지 신속 대응 여단

(SHIRBRIG: Multinational Standby High Readiness Brigade for United Nations Operations)

- 캐나다와 네덜란드가 파트너십 연대를 형성하고 UN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서 위기 시 15~30일 이내에 4000~5000명의 병력을 6개월까지 파견 할 수 있는 신속 대응 여단 창설을 주도
- 1996년 강대국 참여 없이 7개 중견국들이 신속 대응 여단 창설
- 2000~2001년 신속 대응군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에 첫 번째로 파견한 이래 아프리카에서 활동했으나 2009년 폐지

대인 지뢰 금지 협정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Use, Stockpiling, Production and Transfer of Anti-personnel Mines and on Their Destruction)

- 대인 지뢰 금지를 위한 NGO 연합체의 국제 캠페인(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활동에 캐나다 참여
- 캐나다 정부는 1996년 오타와에서 대인 지뢰 금지를 위한 회의를 주최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치적 지지를 위한 캠페인 전개
- 1997년 오타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122개 국가가 대인 지뢰 금지 규약에 서명하였으며, 이는 1999년 3월 발효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1994년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캠페인을 위해서 그룹 결성(Like-Minded Group of Countries)
- 동 그룹은 NGO 연대(Coalition for an ICC)와 긴밀히 협력
- 1998년 로마 회의에서 ICC를 설립하게 된 로마 규약(Rome Statute)을 채택하였으며, 로마 규약의 60번 째 비준 이래 2002년 7월 ICC 설립 발효

소형 무기 및 경무기 무역 규제

(SALW: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 1993년 말리는 UN에 서아프리카에서 SALW의 확산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 1997년 UN의 정부 전문가 패널이 SALW 불법 무역에 대한 회의 소집을 촉구하는 보고서 발표
- 캐나다를 비롯한 중견국들은 NGO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정치적 지지를 위한 세미나, 워크샵을 개최
- 2001년 UN 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불법 소형 및 경무기 거래에 관한,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희석된 '행동 프로그램 (Program of Action)'을 채택

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 1990년대 인종학살을 수반하는 분쟁으로 인해서 캐나다와 호주는 자국 국민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주권 개념을 재정의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
- 2001년 캐나다는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를 설립하고 R2P에 관한 보고서 발행
- 2005년 월드 서밋(World Summit)에서 UN 회원국들은 ICISS 보고서와 R2P 개념을 승인하였으나, 전통적 주권과의 상충 문제로 그 내용을 대폭 완화

인도네시아

인종적·종교적 다원주의, 관용, 민주주의

2억6천만 인구의 90%가 무
슬림으로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
3번째 민주주의 대국

[공공외교 핵심 내러티브]

“‘이슬람’과 ‘민주주의’,
‘현대성’이 함께
공존하는 국가”

wonderful
indonesia



종교간 다이아로그

양자, 지역(Asia Pacific; ASEM) 및 다자(Alliance of Civilizations; NAM) 차원의 Interfaith Dialogue

외교부는 또한 종교 단체 및 청년 단체와 더불어 다양한 범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종교 청년캠프(Asia-Europe Youth Interfaith Dialogue, Asia-Pacific Interfaith Youth Camp, International Youth Forum 등)를 개최

종교간 다이아로그

2007 인도네시아와 영국의 종교 및 시민 사회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슬람 자문그룹(Indonesia-United Kingdom Islamic Advisory Group)을 조직하고 종교적 극 단주의에 대한 대응과 평화의 종교로서 이슬람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

종교간 다이아로그

2004년 세계 및 인도네시아 최대 이슬람 조직(NU: Nahdlatul Ulama)은 외교부와의 협력 하에 이슬람학자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slamic Scholars)를 주최하였고 이후 정규적인 회의 개최

발리 민주주의 포럼 (2008~)

Institute for Peace and Democracy

- 서구식 '민주주의 클럽' 모델 지양
-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비민주주의 국가들도 초청하는 포괄적 접근
- 민주주의의 유일한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는 외부로부터 이식되는 것이 아니며, 내부로부터 발전하는 것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입장을 반영



WHAT IS TO BE D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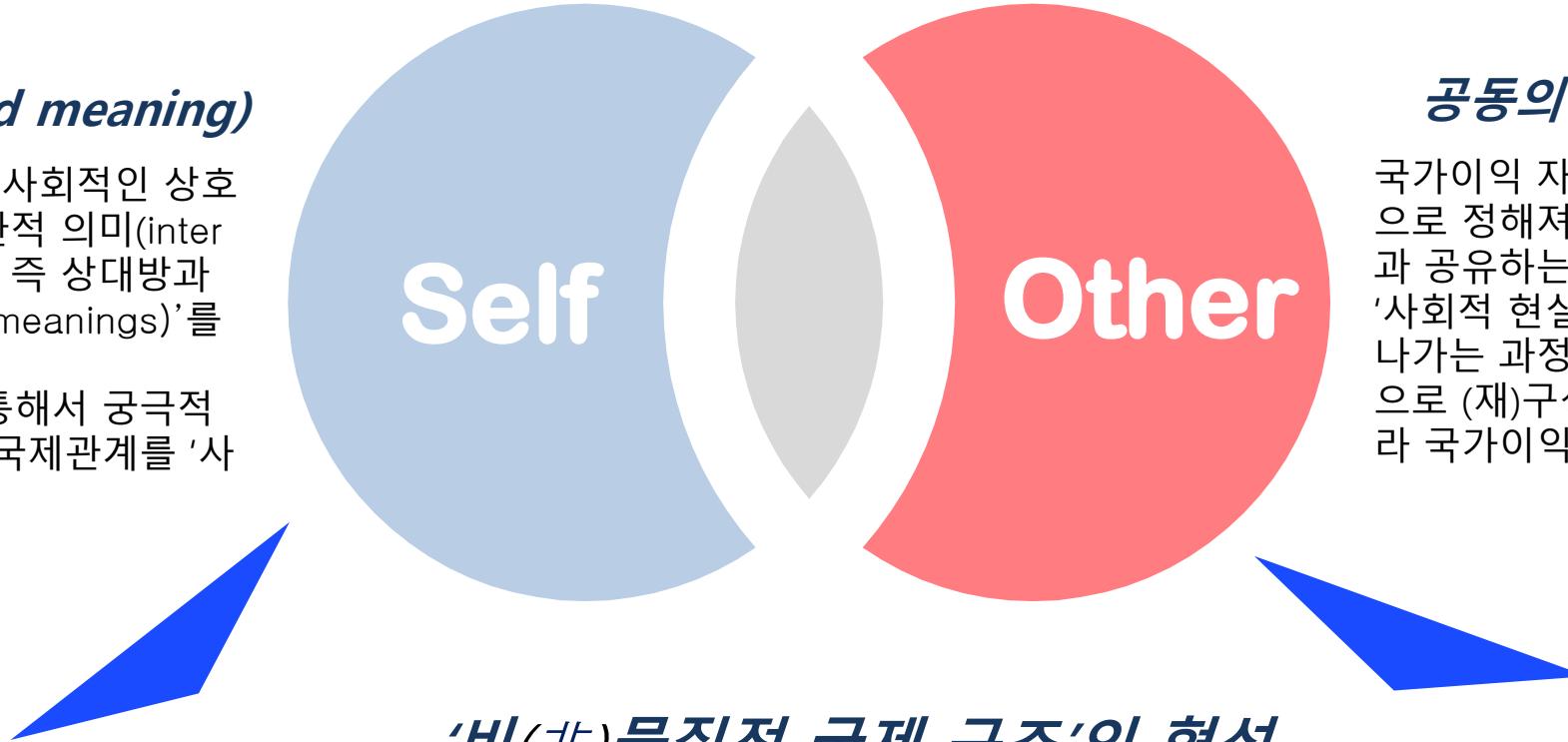
4

한국 공공외교에 대한 함의

공공외교에 대한 정체성 접근

공유하는 의미(shared meaning)

- 공공외교는 상대방과의 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거쳐서 '상호주관적 의미(inter subjective meanings),' 즉 상대방과 '공유하는 의미(shared meanings)'를 확립해나가는 과정,
-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국가 간 관계나 국제관계를 '사회적으로' 구성



'비(非)물질적 국제 구조'의 형성

- 공공외교의 행위 주체는 특정 아이디어나 가치, 규범 등에 대해서 타자와 '공유하는 의미' 생성과 확장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동의 정체성과 이익을 만들어냄으로써,
-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에서 중시하는 물질적 구조(material structure)와는 대비되는 비(非)물질적 국제구조(non-material cognitive structure) 형성에 역할
- 이는 곧 "홉즈적 무정부 질서(Hobbesian anarchy)"와는 상이한, 상호 인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임.

공동의 정체성과 국가이익

국가이익 자체가 모든 국가들에게 불변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공유하는 이해와 의미를 확립하면서 '사회적 현실(social reality)'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정체성 자체도 가변적으로 (재)구성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국가이익도 정해짐.

한국 중견국 외교 역할

01

가치·규범의 완충(values & norms buffer)

- 지리적 완충이 아니라, 자유주의와 반(反)자유주의 간 가치 및 규범의 완충
- 중도적(middle-of-the-road) 가치와 규범의 발신 및 국제 규범질서 재편에 영향

02

포용적 연대 구축

- 중도적 가치·규범을 기반으로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그리고 강대국 경쟁의 틈새에 끼어 있는(like-situated) 국가들뿐만 아니라, 비(非)국가 행위자들과도 포용적 연대 구축
- 공식 다자기구 및 비(非)공식 다자연대를 통해서 '포용적 다자주의' 지향

03

집단적 소프트 파워

-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소프트 파워보다는 중도적 가치·규범에 기반한 다자주의 연대의 집단적 소프트 파워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한 담론과 정책 개발에 주력
- 규범 주창과 확산의 플랫폼으로서의 공공외교의 역할 강화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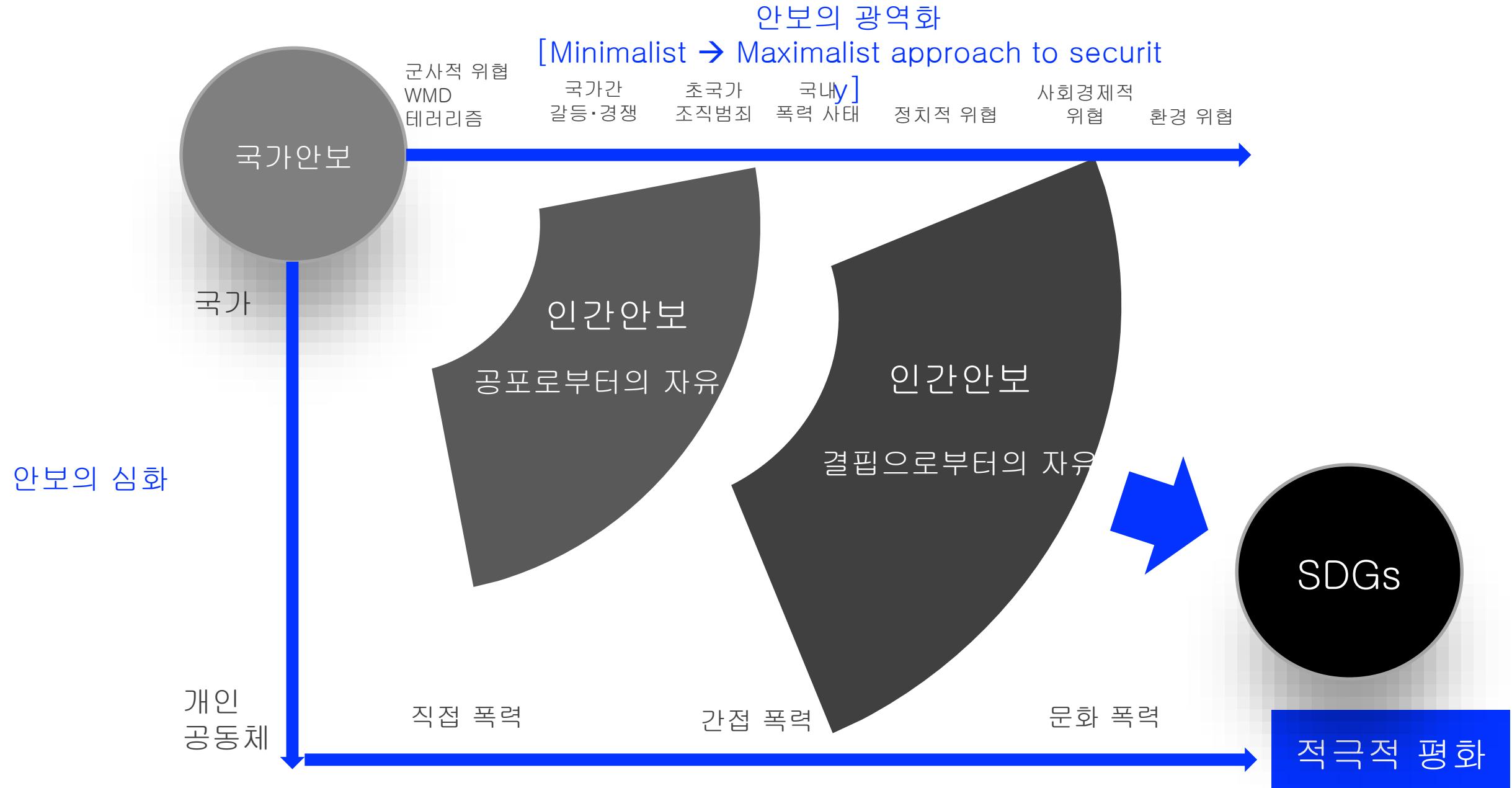
연성균형 soft balancing

-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배타적 경쟁에 대한 중도적 입장에서의 견제
- 지정학적 힘의 정치 거부. 강대국 영향력 경쟁, 패권의 거부
- 중국의 자국 중심적 다자주의("선별적 다자주의")에 대한 견제
- 특히 미중 경쟁의 와중에서 미중 간 이익 상충 분야에서의 대립을 희석시키고 공유하는 이익 분야에서의 협력 유도

05

'지정학 로직(힘의 정치)'에 대한 대항력

중도적 규범으로서의 '적극적 평화, '인간안보', 그리고 *SDGs*



새로운 이슈-정책 분야 개발 - 한반도/동아시아/글로벌 차원

글로벌 차원

글로벌 차원에서의 적극적 평화와 인간안보

- 3Ps
- SDGs (G3, G9, G10, G16)

동아시아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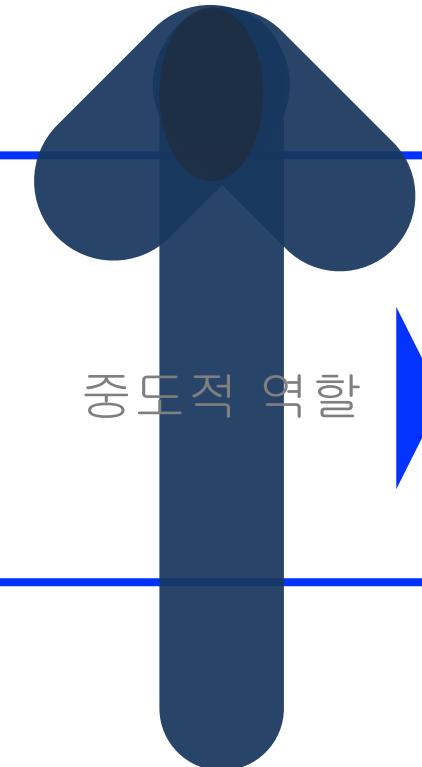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안보체제

- 3Ps
- SDGs (G3: 보건; G9: 산업, 혁신, 사회 기반 시설; G10: 국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G16: 평화·포용·정의 사회 증진)

한반도 차원

한반도 평화체제

3Ps: Peace-keeping → Peace-making →
Peace-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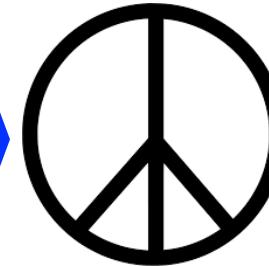
- 가치·규범의 완충
- 포용적 연대 구축
- 집단적 소프트 파워
- 연성균형

‘평화’의 의미와 ‘평화공공외교’

‘사회적 구성물’로서의 평화, - 규범(norm)으로서의 평화 (non-material cognitive structure)

- 평화 → ‘행위자들이 전쟁을 행위/정책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을 정도로 전쟁의 개연성이 낮은 상황’
- 이는 현상/대상/아이디어(특히 전쟁, 평화, 안보)에 대한 행위자들의 *shared understanding/meaning*에 기반을 둔 공동의 정체성, 이익, 목표에 의해서 구성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 행위자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행위를 규제하며, 평가하는 규범 (code of peace)

특정 현상/대상/아이디어
(특히 평화와 안보)에 대한
shared meaning & understanding



- 실천(practice)으로서의 평화 (material structure)

‘갈등과 분쟁을 전쟁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을 물리적 세계에 반영하는 실천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shared meaning의 확산 –
내재화, 제도화, 구조화



공동의 목적
공동의 정체성
공동의 이익
상호 신뢰

평화공공외교

적극적 평화라는 가치와 규범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포함, 담론 소통 활동(discursive & communicative practices)을 통해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유하는 의미를 확립하고 이를 확산, 내재화, 제도화함으로써 ‘평화/안보 실천 공동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주창형 정책공공외교

평화/안보 실천 공동체

“초국가적 영역의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분쟁과 갈등을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확실성(assurance)이 존재할 정도로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집단(cognitive & spatial region)”
[Karl Deutsch et al. 1957]
(e.g. Scandinavia, southern cone of LA, EU, Euro-Atlantic Community, ASEAN, US & Canada...)

'평화공공외교'의 방향성

지정학적 경쟁, '가치의 진영화'의 맥락에서 중도적 가치·규범으로서의 적극적 평화와 인간안보, SDGs

- 특정 정책 자체보다는 정책이 기반하고 있는 가치와 규범에 초점
- 가치와 규범의 프레임에 근거하여 개별 정책을 설파

평화와 안보의 관계
Security through peace, not peace through security

- 국내적 합의 구축
- 담론과 내러티브 구성

과정(process)으로서의 평화
실천(practice)으로서의 평화

- 실천은 비(非)물질적 구조의 공유된 의미, 지식, 규범을 물질적 구조에 반영 함으로써 양자를 연계 (e.g. peacebuilding for security)

다자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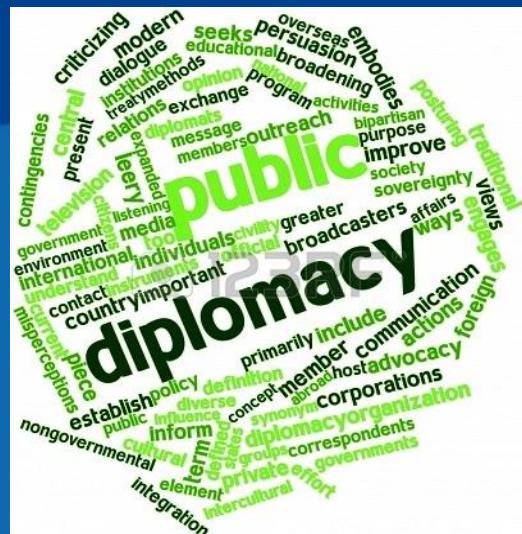
- 국가, 국제기구 및 非국가행 위자와의 중도적 연대

Epistemic community 구성

- ▲ 담론/공유 의미의 생성과 확산, 내재화, 제도화, 구조화
- ▲ conflict prevention/resolution, 군비통제, 군비축소, 비핵화, peacekeeping, peacemaking, peacebuilding...

“민주주의와 한국의 공공외교” 2021 광주민주포럼 2021-05-20 / 한국공공외교학회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 현황과 과제”



송진호

목차

-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 II. 시민공공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
- IV.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
- V. 공공외교 실천 담론 개발을 위한 제언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5.18 참상을 알린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단원 데이비드 돌린저 씨 얘기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참상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힘쓴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5·18 40주기를 맞아 연대한다고 합니다. 국가폭력의 실상을 들춘 이들의 활동상이 재조명 받게 되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과 함께한 미국 평화봉사단(Peace Corps) 단원 4명 등 미국·독일인 9명이 2020년 5월17일 광주를 찾아 40주기 정부 주관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5월19일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의 정의·평화를 위한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광주아시아포럼의 ‘해외 기여자-기억과 연대’ 분야 회의에 참여한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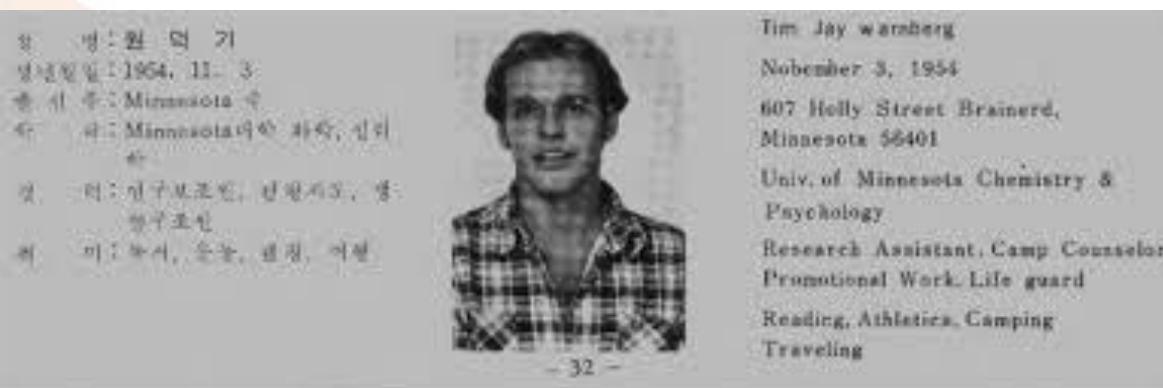
포럼 발제자 중 평화봉사단원 출신은

폴 코트라이트(Paul Courtright), 데이비드 돌린저(David Dolinger),
도널드 베이커(Donald Baker), 빌 아모스(Bill Amos)입니다.

평화봉사단원들은 1974년부터 1981년까지 광주·전남에서 보건·의료
봉사, 장애인 시설 봉사, 한국인 영어 교육활동 등을 했다고 합니다.

코트라이트와 돌린저는 1980년 5월 광주서 체류하며 항쟁에 참여한
단원들입니다. 계엄군의 구타·총격에 다치거나 숨진 시민들을 수습하
는 것을 도왔습니다.

- (출처: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1980년 5월25일 '광주를 즉시 떠나라'는 대사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미국 타임지와 AP통신 등 외신 기자들에게 광주 곳곳을 안내하고 통역을 담당하는 '귀와 입' 역할을 했다.

돌린저는 동료 단원 3명과 5월27일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상무 충정작전으로 숨진 시민군 시신 수습을 돋는 등 끝까지 시민과 함께 했답니다.

당시 코트라이트는 광주 참상을 알리려고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오는 5월 한미 양국에서 '5·18 회고록'을 출간한답니다.



(출처: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위르겐 힌츠페터



1937년 독일 출생
1969년 베트남전쟁 종군 취재
당시 사이공 춘계공세에서 부상당함. 박정희 정권 때부터 수차례 한국 방문, 김대중 김영삼 등과 인터뷰
1980년 독일 NDR, ARD TV 카메라 기자로 5·18 현장 취재
1980년 9월 17일 '기로에 선 남한'이라는 특집 제작
1989년까지 도쿄에서 근무하다 현재 독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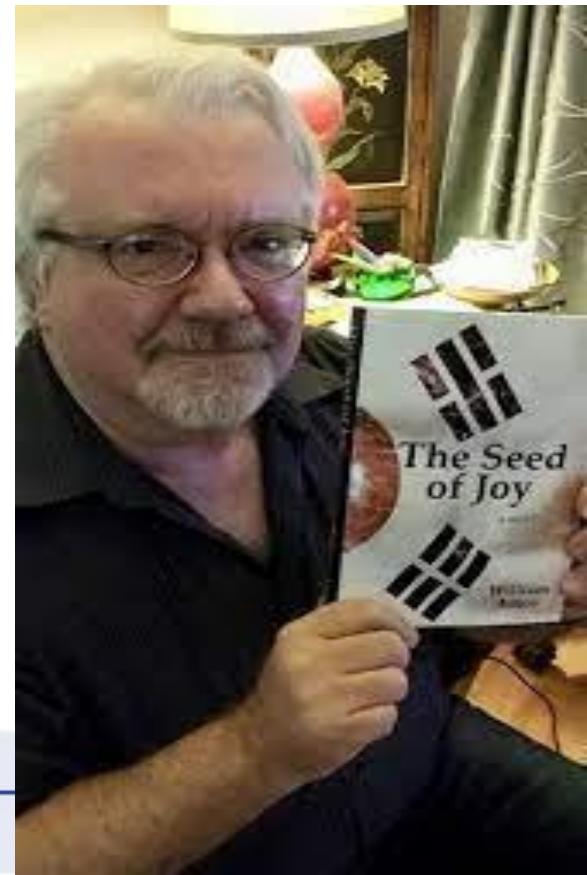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도널드 베이커는 항쟁 때 헌트리 목사의 사진 촬영 필름을 미국으로 반출했으며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한국학과장으로 5·18 학술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빌 아모스는 1999년 동료 단원의 증언과 현지 조사를 토대로 5·18 소설 '기쁨의 씨앗(The Seed of Joy)'을 폐냈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1980년 6월 10일
미국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문서
(광주 소요에 대한 거주자의 견해)에서
평화봉사단원의 활동을
'자랑스럽다'고 평가했답니다.

- (출처: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1980년 7월 외신이 단원의 증언을 바탕으로 '5·18의 잔혹성이 감춰져 있다. 사망자 수도 축소 발표됐다.'는 보도를 하자 외국인 사찰·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단원의 신원 조사 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미국 등 각국 정부 대사관에 강하게 항의했으며 권력찬탈용 학살을 감추기 위해 각종 허위 문건으로 단원의 활동 자체를 왜곡했습니다. 단원들은 결국 활동 기한을 1년 가량 채우지 못했습니다.

- (출처: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K-POP, 한류 그리고 혐한류 과거경험 으로부터 학습한다.]

2011년 6월 K-POP 아이돌 그룹들이 연예기획사인 SM타운 라이브월드투어 이름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당시 르몽드지는 대단한 성황을 이룬 콘서트와 K-POP에 관하여 상세한 기사를 실으면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코멘트가 있었다.

K-POP은 긍정적이나 이상하게도 왜 한국 정부는 민간 연예기획사의 콘서트까지 지원하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것이다. 통칭 정부가 앞장서서 '한류(Korea Wave)'라는 이름의 문화수출정책을 통하여 문화 종사자 해외진출과 문화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지에 대하여 어색함과 함께 정부의 직접개입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심지어 한국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프랑스 K-POP 팬(한류 팬)들과 간담회까지 개최한 사실까지 보도하였다.

경성국력(Hard Power)시대를 지나 연성국력(Soft Power)를 넘어선 스마트 패워를 이야기하고, Track 1, Track 2를 넘어서는 Multi-track Diplomacy와 Public Diplomacy(공공 외교)를 말하면서 굳이 왜 정부가 직접 드러내고 지나친 한류 마케팅에 직접 개입하여 이웃나라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아가 역풍을 맞아서 "혐한류" 현상까지 맞닥뜨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여야 한다.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K-POP, 한류 그리고 혐한류 과거경험 으로부터 학습한다.]

파리의 폭발적 반응에 모 정당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국가적 쾌거"라고 칭찬하거나(자유선진당), "우리 기상을 여지없이 발휘된 놀라운 쾌거"라고 코멘트 한 민주당 및 모든 언론매체가 나서서 '국가브랜드'나 '한류의 세계화' 등등 자화자찬의 자극적 언어로 도배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는 아시아의 한류-혐한류 현상에서도 여실히 보여주는 문제로서 문제는 상대방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상대방 정부의 불필요한 오해와 긴장, 불편함을 야기시키지 않는 '역지사지'의 국제관계의 철학과 기법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다.

JYP의 박진영은 한류열풍 못지 않게 혐한류 분위기가 중국에서 퍼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일방적인 문화 수출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2011년 9월, 한겨레신문)

'한류'의 부정적 측면은 일방적 문화수출의 문제 및 정부 개입(주도)형 문화정책에 대한 경계이다.

(환구시보 및 르몽드지)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2014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사업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청소년 글로벌 코리안 인재육성사업

OK Friends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

출국 전 캠프 및 발대식

2014년 1월 16일(수) ~ 17일(목)

주소: 서울 올림픽파크텔

주최: 재외동포재단

주관: TACA

한국Y!



뉴욕 NOVA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피스콘서트
-뉴욕주 한인/중국인/일본인
음대생과 음악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재외동포 청소년 가
족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있는
평화음악회-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2014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사업



뉴욕 UN본부
재외동포 청소년과 함께하는
Leave No One Behind
MDGs 캠페인



뉴저지 버겐카운티 위안부기림비
“할머니에게 명예와 인권을!!”
희망나비 캠페인
인류 보편가치로서의 여성 인권과
전쟁과 여성, 분쟁 하 성폭력
역사기억과 역사대화 캠페인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2014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사업



재외동포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뉴욕 타임스퀘어광장-
-벤쿠버 BC주정부광장-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2015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사업



재독일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통일공공외교 캠페인
-독일 통일 박물관학교-
-평화통일 자전거대행진-
-통일독일 시민여론조사-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2015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공공외교단사업



재독일 한글학교캠프 자원봉사활동

- 한민족정체성교육-
- 재외동포 이해교육-
-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 놀면서 배우는 한국어교실-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아세안의 눈으로 평가하는 대한민국 신남방정책]

아세안의 대표적 싱크탱크 ISEAS가 2020년 1월 30일자로 대한민국 신남방정책에 대한 오피니언을 발표했습니다. 요약만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인용함)

1. 신남방정책(NSP)을 통해 한국정부는 대외관계에서 아세안에 미증유의 약속과 우선순위를 천명함.
NSP는 문대통령의 강력한 개인적 헌신과 의지를 정상외교에 적극 활용한 점 및 이행을 위한 제도적 구조를 개선한 것(신남방특위 설치 및 운영)을 특징으로 함.
2. NSP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견인보다는 강력한 경제적 목표에 의해 뒷받침됨. 한국의 대 아세안 무역, 투자, 개발원조는 지속 증가 중. 전통적인 안보동맹의 차원에서는 한국의 무기수출 촉진과 한반도 평화아젠다에 대한 아세안의 기여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음.

I. 시작하는 말; 익숙함에 질문하기

[아세안의 눈으로 평가하는 대한민국 신남방정책]

3. NSP를 발전시키려면, 한국은

베트남에 대한 과잉 집중을 넘어서기 위해

아세안 모든 회원국들을 아우르는

보다 폭넓은 경제적 참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세안 시장 접근성 증진과

한국 내 (아세안의) 문화적 진흥을 위한 **양방향 교류를 육성하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메카니즘들과

개방적이며, 포용적이고, 규칙 기반의 지역협력체제(architecture)를

지원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지역협력의 아이디어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음

“개인적으로는 부분적 동의가 가지 않는 논거들도 군데군데 보이지만 솔직히 스스로의 부끄러운 민낯이 읽혀졌을 때의 화끈거림도 있습니다.”

II. 시민공공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公共外交, Public Diplomacy)」

첫째, '공(公)'은 '숨김없이 드러내놓다'라는 뜻,
즉 **공개(公開)**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공공외교는 **공개외교**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1세기 공공외교의 핵심은
비밀과 폐쇄보다는 **개방과 참여**이다.

공개외교로서 공공외교의 내용적 핵심은
국내외 대중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외교, 즉 **소통외교**이다.

(출처: 공공외교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II. 시민공공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公共外交, Public Diplomacy)」

둘째, '공(共)'은 여럿이 함께한다는 '집합'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공공외교는 **공동(共同)외교**의 뜻을 담고 있다. 사실 상대국 정부의 외교 담당자가 아니라 상대국 국민 전반,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의 국민까지도 포함하는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외교**이다.

다양한 층위에서 다양한 부류의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공공외교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공공외교에는 외교 전담 부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 실무 부처나 다양한 민간 행위자들의 참여라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중구난방으로 참여해서는 외교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공(共)', 즉 여럿이 함께하는 집합은 조율되어야 한다. 공공외교는 단순한 공동외교가 아니라 다양한 주체를 염두한 네트워크 외교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

(출처: 공공외교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II. 시민공공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公共外交, Public Diplomacy)」

셋째, '공(公)'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공공외교는 특수한 사익이 아니라 **보편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외교 활동**을 지향한다. 공공외교라는 말에서 '외교'가 뜻하는 바도 이러한 **공익성**과 통하는 바가 크다.

외교란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자국의 보편적 이익을 대표하는 활동이다. 그런데 여기서 민간 행위자들이 주를 이루는 공공(또는 문화) 분야의 활동에 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이 분야에도 여전히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부가 담당할 역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는 네트워크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역할을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다.

(출처: 공공외교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II. 시민공공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公共外交, Public Diplomacy)」

21세기 공공외교는 **공개외교의 개념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소통외교에 대한 강조**,
외교 전담 부처의 전통적인 역할론을 넘어서
정부 내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도 포함하는 **네트워크 외교의 부상**,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공개되는 쟁점들을 조율하고
각자의 이익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활동에
중심성을 제공하는 **공익외교의 세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러한 공공외교는
단순히 중립적인 상호 소통과 문화교류의 의미를 넘어서
상대적으로 비대칭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벌어지는 권력게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공공외교의 연구에서 소프트 파워의 개념
에 그 출발점을 설정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출처: 공공외교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II. 시민공공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公共外交, Public Diplomacy)」

- 1) 소프트파워의 이해
- 2) 스마트파워의 이해
- 3) 지식/문화 기반 매력론 이해
- 4) 국가브랜드 국가정책 지식공공외교 이해
- 5) 한류와 문화공공외교
- 6) 보편적 가치와 규범외교 이해
- 7) 상황지성 집단지성과 네트워크외교 이해

(출처: 공공외교의 이론적 이해, 김상배)

II. 시민공공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공공외교법」(16.8월 시행) :

국가의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 부문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

공공외교는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문화, 지식, 정책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

(공공외교법 제2조)

(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방안 / 외교부, 2020-08-07)

II. 시민공공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17.8월 수립)

은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주요 전략 부문으로 제시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체계화 및

△민관 협업을 통한 국민 공공외교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제시

(비전)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매력 한국

(4대 목표) ①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한 국격제고 및 국가이미지 강화
②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확산
③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전략 환경 조성
④공공외교 주체의 역량강화와 상호 협업체계 정착

(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방안 / 외교부, 2020-08-07)

II. 시민공공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계획 (2020.5.21. 관계기관합동)

- (5대 추진과제) ①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②국제담론 참여 강화
③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④협력 프로젝트 확대
⑤국제협력 역량강화 지원

- (중점 과제)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운영
△‘대외직명대사’*임명 및 활동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포스트 코로나 국제협력
△스피킹 투어(한반도 평화 관련) 등의 사업 추진될 예정

(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방안 / 외교부, 2020-08-07)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1. 글로벌 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공간 확대

- △ **평화 · 인권 · 환경 · 보건 등 보편적 가치 추구 주류화** 및
 - △ **多주체** (정부/민간 기관·단체/개인 등)-
 - △ **多분야**(정치/경제/사회 등)-
 - △ **多트랙**(전문가/ 여론주도층/일반 대중 등)을 통한 국제사회 소통 중요성 부각
- **코로나19 계기 급상승한 국제사회 인지도 · 신뢰도에 부응한 활동 강화 필요**

(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방안 / 외교부, 2020-08-07)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1. 글로벌 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공간 확대

- △ “G20 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우리의 자산을 공유하면서...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20.3.31, 국무회의)
- △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유엔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도 구현.” ('19.9 UN총회 연설)
- △ “대한민국은 경제력뿐만 아니라 인권이나 평화 같은 가치의 면에서도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19.8, 수보회의)

(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방안 / 외교부, 2020-08-07)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2. 시민사회의 강점 활용

- 시민사회는 **자율성과 전문성 및 글로벌 채널과 인적網을 보유하고 있어, 신속·유연하고 효과적인 활동 가능**
 - 자발적으로 국내외 기관단체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국제사회 이슈를 효과적으로 제기
- 시민사회와 협력 및 공동 대응을 통해 **국가적 의제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 등에 있어 시너지 창출 가능**
 - * 타국 시민사회 사례
 - (노르웨이) **평화공공외교** 추진에 시민사회가 상호인력교환, 정책협의 등 협력주체로 참여
 - (독일) **통일공공외교** 과정에 문화교류, 인권·민주주의 지원 활동 (중앙부처 총괄 + 민간 재단 등 실행) 등 참여→ 통일에 부정적이던 국제사회 신뢰와 지지 확보
 - (이스라엘/디아스포라) **공공외교장관**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 통합관리

(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방안 / 외교부, 2020-08-07)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3.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계획 추진체계

비전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 (시민사회 국제협력 강화)

①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②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지원 ③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

추진
원칙

- ◇ 시민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
- ◇ 정부는 지원하되 시민사회 자율성과 독립성 존중
- ◇ 시민사회-정부 간 소통 및 협력 제도화

추진
방향

민관 파트너십 강화 및 국제협력 기용자원들을 결합해 시너지 배가

추진
방향

시민 사회

- 능동적, 주도적 이슈 제기
- 글로벌 연대/네트워크
- 전문성과 추진력 배양

파트너십

공공 부문

-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전략 수립
- 국민참여 공공외교 인프라지원

연대 · 협력

추진
과제
(11개)



국제 사회
◦ 현지 시민사회
◦ 국제NGO/기구
◦ 재외동포(디아스포라)



추진
방향

1.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 ① '공공외교 지원 네트워크' 운영
- ②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시민사회발전위 국제분과 신설

2. 국제담론 참여 강화

- ① 국제회의 대응협력 강화
- ② 대외직명대사 임명

3.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지원

- ① 현지 네트워크 구축
- ② 현지 활동 지원

4. 협력 프로젝트 확대

- ① 코로나19 대응 협력 + 포스트 코로나 협력
- ② 한반도 평화
- ③ 젠더 · 여성평화 · 역사정의
- ④ 국제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

5. 국제협력 역량강화 지원

- ① 교육훈련 등 지원강화

(출처: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 활성화방안
/ 외교부, 2020-08-07)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4. 공공외교와 해외정책홍보의 차이

	Public diplomacy	Foreign propaganda
Purpose	to influence public opinion in order to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to influence public opinion in order to achieve foreign policy goals
Target group	foreign public	foreign public
Method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mainly by means of dialogue	communication of information mainly by means of one-way messaging
Instruments	techniques of mass communication mainly	techniques of mass communication mainly

Source: Author's own processing.

(출처: 브리타니카사전)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5. 고전적 공공외교 이해와 비판

Public diplomacy, also called **people's diplomacy**,
any of various **government-sponsored efforts**
aimed at communicating directly with foreign publics.

Public diplomacy includes
all official efforts to convince targeted sectors of foreign opinion
to support or tolerate a government's strategic objectives. (??!!)

Methods include statements by decision makers,
purposeful campaigns **conducted by government organizations**
dedicated to public diplomacy,
and efforts to persuade international media
to portray official policies favourably to foreign audiences.

(출처: 브리타니카사전)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6. 시민공공외교 주체 논쟁

State-centric

Public-centric

State-based

Public-based

<p>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te-initiated project• state-driven needs, goals• state-controlled• state-public relations positive, neutral to negative• public largely passive, "target audience"• international broadcasting, nation branding <p>assertive</p>	<p>I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blic-initiated project• aligned to state needs, goals• public-state relations neutral to positive• public-initiative, state co-opted to work with public• public active, participatory• networked approaches, empowerment, capacity building <p>associative / collaborative</p>
<p>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tate-initiated project• aligned to public needs, goals• state-public relations neutral to positive• state-sponsor, public partnerships• public passive/participatory 'engagement' strategies, relational approaches <p>associative / collaborative</p>	<p>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public-initiated project• public-driven needs, goals• public-controlled• public-state relations neutral to negative• state targeted, state irrelevant / state attacked• network, social media campaign 'crisis public diplomacy' <p>assertive</p>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7. 고전적 공공외교와 시민참여형 공공외교2.0의 차이

	Traditional public diplomacy	21 st century public diplomacy
Conditions	Conflict, tensions between states	Peace
Goals	To achieve political change in target countries by changing behavior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 promotion to create receptive environment and positive reputation of the country abroad
Strategies	Persuasion managing publics	Building and maintaining relationships Engaging with publics
Direction of communication	One-way communication (monologue)	Two-way communication (dialogue)
Research	Very little, if any	PD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where feedback is also important
Message context	Ideologies interests information	Ideas values collaboration
Target audiences (publics)	“general” public of the target nation; sender and receivers of messages	Segmented, well-defined publics + domestic publics; Participants
Channels	Traditional mass media	Old and new media; often personalized
Budget	Sponsored by government	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8. Track II Diplomacy의 이해

Track II diplomacy or "backchannel diplomacy" is the practice of "non-governmental, informal and unofficial contacts and activities between private citizens or groups of individuals, sometimes called 'non-state 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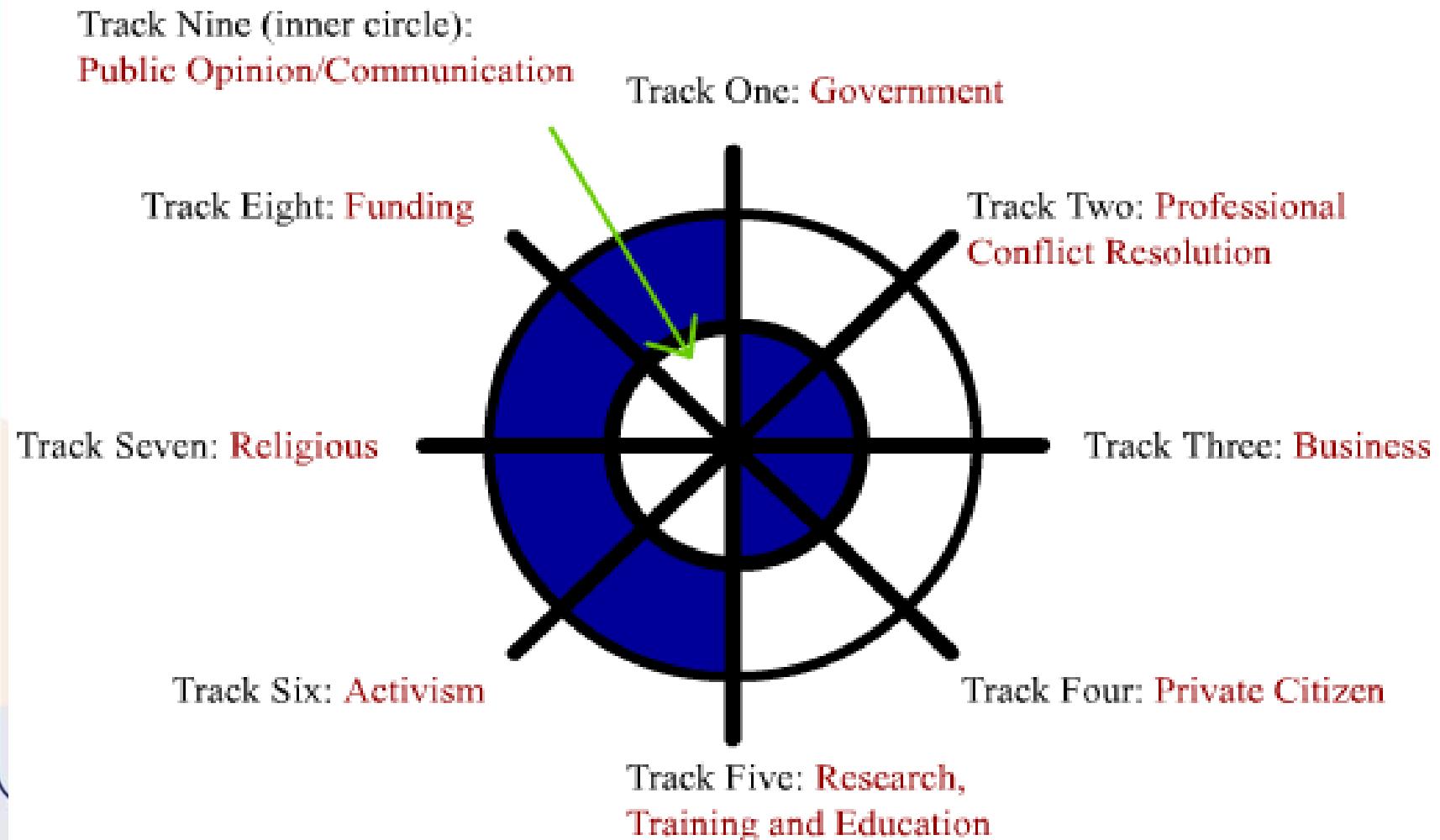
It contrasts with **track I diplomacy**, which is **official, governmental diplomacy** that occur inside official government channels.

However, track two diplomacy is not a substitute replacement for track one diplomacy. Rather, it is there to assist official actors to manage and resolve conflicts by exploring possible solutions derived from the public view and without the requirements of formal negotiation or bargaining for advantage.

In addition, the term **track 1.5 diplomacy** is used by some analysts to define a situation where official and non-official actors cooperate in conflict resolution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9. Multi-Track Diplomacy의 이해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9. Multi-Track Diplomacy의 이해

The idea of multi-track diplomacy evolved over a period of years. In 1981 Joseph Montvile wrote an article on foreign affairs, creating the concept of track one and track two.

In 1985 Ambassador John W. McDonald wrote the first book entitled *Conflict Resolution: Track Two Diplomacy*, which was published by the State Department in 1987.

In 1989, McDonald wrote a chapter in the book expanding the two tracks to five tracks, and in 1991, McDonald and Dr. Louise Diamond published the book *Multi-Track Diplomacy, a systems approach to peace*.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9. Multi-Track Diplomacy의 이해

The Multi-track diplomacy consists of nine tracks, as follows:

Track 1 – Government, or Peacemaking through Diplomacy.

This is the world of official diplomacy, policymaking, and peacebuilding as expressed through formal aspects of the governmental process.

Track 2 – Nongovernment/Professional, or Peacemaking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his is the realm of professional nongovernmental action attempting to analyze, prevent, resolve, and manage international conflicts by non-state actors.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9. Multi-Track Diplomacy의 이해

Track 3 – Business, or Peacemaking through Commerce. This is the field of business and its actual and potential effects on peacebuilding through the provision of economic opportunities, international friendship and understanding, informal channels of communication, and support for other peacemaking activities.

Track 4 – Private Citizen, or Peacemaking through Personal Involvement. This includes the various ways that individual citizens become involved in peace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rough citizen diplomacy, exchange programs,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special interest groups.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9. Multi-Track Diplomacy의 이해

Track 5 – Research, Training, and Education, or peacemaking through Learning. This track include three related worlds: research, as it is connected to university programs, think tanks, and special-interest research centers; training programs that seek to provide training in practitioner skills such as negotiation, mediation, conflict resolution, and third-party facilitation; and education, including kindergarten through PhD programs that cover various aspects of global or cross-cultural studies, peace and world order studies, and conflict analysis, management, and resolution.

Track 6 – Activism, or Peacemaking through Advocacy. This track covers the field of peace and environmental activism on such issues as disarmament, human rights, social and economic justice, and advocacy of special-interest groups regarding specific governmental policies.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9. Multi-Track Diplomacy의 이해

Track 7 – Religion, or Peacemaking through Faith in action. This examines the beliefs and peace-oriented actions of spiritual and religious communities and such morality-based movements as pacifism, sanctuary, and nonviolence.

Track 8 – Funding, or Peacemaking through Providing Resources. This refers to the funding community – those foundations and individual philanthropists that provide the financial support for many of the activities undertaken by the other tracks.

Track 9 – Communications and the Media, or Peacemaking through Information. This is the realm of the voice of the people: how public opinion gets shaped and expressed by the media-print, film, video, radio, electronic systems, the arts.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9. Multi-Track Diplomacy의 이해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10. 시민공공외교 논의에 앞선 시민사회 파트너쉽 이해

진정한 의미의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쉽이란;

- 1) 시민과 시민사회의 정치적 능동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협치 시스템)를 마련하는 일
- 2) shrinking civic space; 시민사회와의 협치의 공간을 넓히는 일
- 3) SDG Accelerator(SDG 이행 가속자 촉진자)로서의 Governance(협치)는 Global SDG Action Platform for Decade of Action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협치 재해석하기가 필요
- 4) 개발효과성 증진을 위한 부산글로벌파트너쉽 기억을 되살려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SDG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SDG Action Governance 구축의 관점에서 CSO의 역할과 과제 모색의 필요성 강조하기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10. 시민공공외교 논의에 앞선 시민사회 파트너쉽 이해

5) 전통적인 정부-시민사회 관계성 토론의 주제인;

참여(participation)-파트너쉽(partnership)-협치(governance)의 전개 과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민사회-정부 파트너쉽 논의는 '참여'의 수준과 '참여'의 방식 토론에 발목 잡혀 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일부 파트너쉽 주제도 있으나 대부분 equal partnership의 우호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강화 담론으로 읽혀진다. 협치에 관한 제대로 된 담론도 부족해 보인다.

동시에 정부의 국민소통 시민사회 참여강화, 나아가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쉽 프레임워크 구축과제 역시 명분과 레토릭 축적을 위한 형식으로만 활용될까 염려된다. 나아가 정부-시민사회 관계도 협치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의견을 묻는 형식적인 관계에서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아니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다.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10. 시민공공외교 논의에 앞선 시민사회 파트너쉽 이해

- 6)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위 물 들어오니 배 띄운다는 식으로 VIP께서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입니다.**'라는 워딩에 시민사회도 정부도 철학적 사유도 자기성찰적 반성과 진지한 고민도 없이 너도나도 망둥어도 꼴뚜기도 뛰는 꼴이 될까 두렵다.
- 정부도 입으로는 협치와 참여, 심지어 시민참여형 공공외교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시민사회를 **equal partner**, 대등한 파트너, 대화상대자 **interlocutors**로 인정하기에는 인색하고(공동 정책생산과 공동 사업집행), 또한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방법이 학습되어 있지 않다.

III. 시민공공외교와 시민사회 참여 중요성

10. 시민공공외교 논의에 앞선 시민사회 파트너쉽 이해

6) 파트너쉽의 본질은 '함께' 그리고 '더불어'가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를 공공외교 파트너로 여기고 그렇게 대우한다면 정책과 사업 형성과정과 실천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만, 그 '함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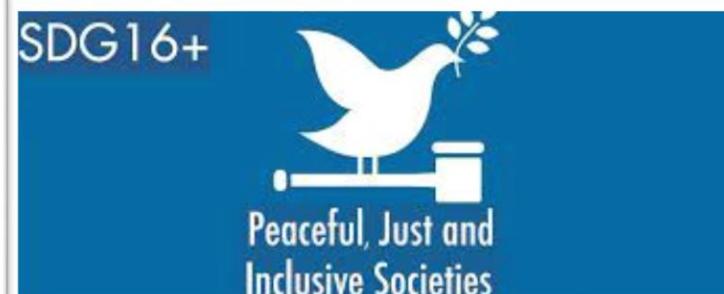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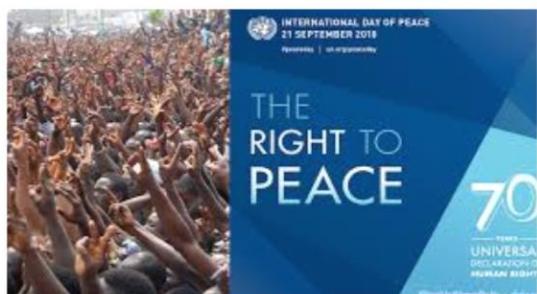
역량강화도 프로그램 강화도 개도국 시민사회 지원도 인지제고도 그 '함께'의 철학적/총론적/절차적/과정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또 하나의 동원된 참여와 무느만 파트너쉽일 뿐이다.

항상 반복 경험해 왔듯이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미리 정책방향 정해 두고 소위 전문가 연구용역 절차 거쳐서 다자간 이해관계자(CSO academia multi-stakeholders) 의견청취를 참고 삼아 듣는 통과례 밟는 형식을 거치는 것은 아닐런지? 그나마 청취한 의견도 정책과 사업 현장에 반영되기 보다는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묵살 또는 무시되는 일이 비일비재 해왔다.

IV.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

1. 광주정신과 지속가능발전목표, SDG16+

1) △군사주의에 맞서는 **평화주의**,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주의**,
△국가 안보를 넘어서는 **인간 안보**(human security),
△일방주의 보호주의에 맞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같은
오늘날 역사의 대척 지점에 서 있던
레짐(regime) 간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
평화권(R2P, Right to Peace)과 **발전권**(R2D, Right to Development)
의제를 융합하여, 세계시민사회가 다함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로 연대하는 길 이야기로 **1980년 광주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인류 공동의 지구행동 미래과제로써
구체화 시켜 나가는 **시민공공외교의 중심주제**라고 생각한다.



IV.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

1. 광주정신과 지속가능발전목표, SDG16+

2) 이러한 관점에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인류보편가치와 규범으로서 현재성을 띠고 세계시민사회와 공조와 연대를 바탕으로 견인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특별히 **SDG16+** 의제와 광주정신을 연결하고 주체들 간의 연대를 고민해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평화, 인권,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한 광주정신은 SDG16+에서 지향하는 '평화롭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민주사회(peaceful, just, inclusive societies with which are free from fear and violence)' 가치와 규범, 전략 및 행동들과 만나야 한다.

아울러 이는 인권-발전-평화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 국제사회의 의제 해결(즉, SDGs 목표 달성)을 위하여 행동하는 세계시민사회 핵심그룹들과 소통하고 공조해 나가야 한다.

IV.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

2.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와 국제개발협력

- 1) 국제사회에서 군사주의, 권위주의 종식을 위해서는 **평화와 인권 가치 기반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국제사회 공통의 철학, 규범 및 제도로 확립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와 인권의 가치 중심의 국제 질서는 근대 국가 설립 이후 현실에서 이룩하기가 매우 요원하며, 추상적인 가치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 2) 수많은 국제규범과 유엔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은 대내적으로는 한반도 분단, 대외적으로는 홍콩 민주화 시위와 인권옹호자 (Human Rights Defender)에 대한 탄압, 유럽의 대규모 난민 사태와 보트 피플의 사례, 코로나가 보여준 혐오차별배제 민낯과 국경봉쇄, 미얀마 민주주의의 위기 등 자국중심주의, 일방주의, 시민사회의 위축 등 **평화와 인권의 후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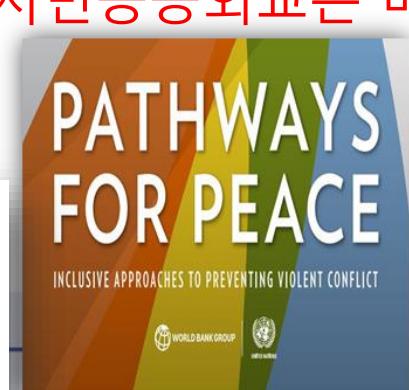
IV.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

2.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와 국제개발협력

- 3) 이러한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국제협력은
 - 1) 군사주의, 권위주의 체제의 결과로 더 소외 받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 2) 오늘날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감염병 대응 국제공조 이슈에 있어서 군사주의 권위주의 국가와의 교류가 단절되었을 때, 갈등을 완화하는 매개로도 작동될 수 있음을 보았다.
- 4) 이러한 점에서 군사주의/권위주의 종식을 위한 국제질서수립을 위해 인권-민주주의-평화적 접근에 기초한 국제협력과 시민공공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SDG 16 implementation & the path
towards leaving no one behind



IV.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

3.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라고 쓰고, '시민사회 국제협력 강화'라고 읽는다!!!

- 1)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유엔 총회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하면서 평화, 인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유엔 목표를 실현하는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국제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 2) 또한 2020년 5월 10일 취임 3주년 기념연설에서는, "인간안보 (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할 것을 선언하면서,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하여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 3) 이를 통해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IV.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

3.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라고 쓰고,
'시민사회 국제협력 강화'라고 읽는다!!!
- 4) 위에서처럼, 군사주의 권위주의를 종식하기 위한 오늘날 의제는 단지 무력갈등 상황 종식을 넘어선, 인간으로서의 필수적 삶의 유지에 필요한 요소, 즉, **의식주를 비롯한 문화와 교육** 의제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을 포괄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류의 존엄성 해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해결을 위해 **공조하는** 것이야말로 군사주의와 권위주의의 체제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IV.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

3.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외교'라고 쓰고,
'시민사회 국제협력 강화'라고 읽는다!!!
- 5) 인권과 평화적 접근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시민참여와 민간교류가 중심이 되는 협력모델(=시민참여형 공공외교)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평화적 질서는 국가 간 협정이나 규범적 질서에 의해 단번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바탕 위에서 평화적 상태의 공존이 공기처럼 순환 되어야 한다. 국제 질서의 '조건'으로서만 평화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국경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그 자체로서의 평화를 권리로 누리기 방안으로 사람 중심의 사람의 얼굴을 가진 국제협력과 시민공공외교가 요청된다.
- 6)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이러한 모든 형태의 분쟁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사람 중심의 국제협력/공공외교를 수행하면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는 **평화-인권-민주주의 의제**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이슈를 제기하고, 글로벌과 로컬의 네트워크와 분야별 전문성으로 민주적이고 인권적이며 평화적 지형을 형성하는 핵심 주체라고 할 수 있다.

V. 공공외교 실천 담론 개발을 위한 제언

1. 새로운 시민공공외교 주체로서 기념재단의 역할 모색
5.18기념재단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제주4.3평화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2. 기억-기념을 넘어서서 미얀마를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 및 시민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민주기금' '국제민주재단' 실천과제 개발,
제도화 과제(입법/예산) 및 재단의 역할 강화



V. 공공외교 실천 담론 개발을 위한 제언

3. 공적개발원조(ODA) 책무성 제고와 민주주의-인권-평화와 ODA 연계형 국제개발협력모델과 지속가능발전모델 개발: SDG16+ & HDP NEXUS
4. 청년과 청소년, 재외동포 차세대를 공공외교 주체로 역량 개발
5.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소통하는 공공외교포럼 활성화
광주민주포럼(GDF) - 서울민주주의포럼(SDF) - 부산민주주의포럼 (BuDF) - 평창평화포럼(PPF) – 제주포럼 - 경기DMZ평화포럼 등



**“We are determined to foster
peaceful, just and inclusive societies
which are free from fear and violence.
There can be
no sustainable development without peace and
no peace without sustainable development.”**

**“평화 없는 지속가능발전은 불가능하고
지속가능발전 없는 평화 또한 불가능합니다.”**

(Preamble of the UN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 GOALS TO TRANSFORM OUR WORLD

**"We will not enjoy development without security(peace),
we will not enjoy security without development,
and we will not enjoy either
without respect for human rights.**

Unless all these causes are advanced, none will succe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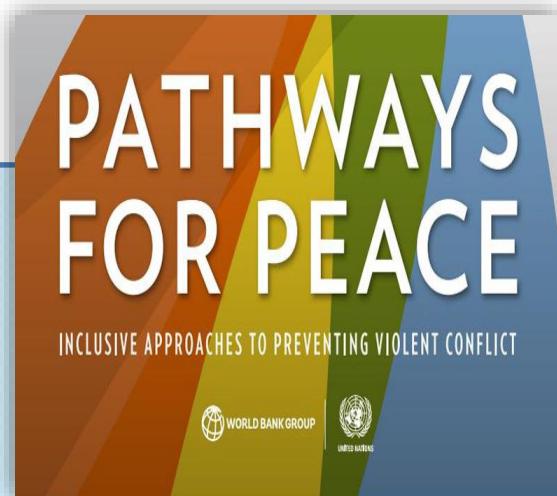
**“우리는 평화 없이 발전할 수 없고,
발전 없이 평화를 향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권존중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향유할 수 없습니다.
평화-인권-발전이 동시에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Late Kofi Annan, Former UNSG)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남북한 지속가능발전의 전제조건이자 관건입니다.
‘**소극적 분단평화**’에서 나아가
무력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예방적 평화**’
그리고 이를 넘어선
‘**적극적 평화 = 적극적 통일 평화**’로의 진전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속가능발전의 관건이 됩니다.”



(2018서울평화포럼 선언문)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국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받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73차 UN총회 기조연설문 중에서)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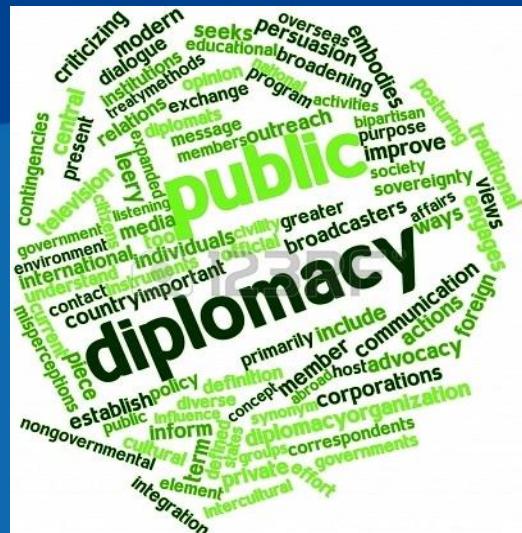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제73차 UN총회 기조연설문 중에서)

“민주주의와 한국의 공공외교” 2021 광주민주포럼 2021-05-20 / 한국공공외교학회

“평화-인권-민주주의 공공외교 현황과 과제”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와 한국의 공공외교

토 론 문

김찬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국장 직무대행, 국제협력담당)

1) ‘국제연대’ 와 ‘공공외교’

1980년 5·18광주항쟁을 통해 광주시민은 폭력적 권력에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을 경험하며 수동적 역할의 사회구성원에서 자율적 역사의 주체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즉, 민주주의 체제의 주체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5·18을 경험한 한국 시민은 이후 권위주의 독재 권력에 지속해서 저항했으며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민주화 체제로 전환을 이루어냈다. 5·18 진상규명 투쟁은 마침내 가해자 집단을 제도적으로 단죄하기에 이르렀다. 5·18광주항쟁은 시민투쟁이 역사 정의 실현한 상징적 사건으로 국내외 시민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5·18의 진상을 알리는 활동은 재외 동포와 해외 양심적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현지 매체를 통해 5·18 보도를 접한 이들은 즉시 대응활동을 조직하였다. 이는 지속되었고 전두환 신군부 만행을 국제적으로 알렸다.

독일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연대 운동이 발생했다. 서명운동, 유인물 배포, 단식투쟁, 추모행사, 대사관 앞 시위가 전개되었다. 특히 독일의 경우 1980년부터 ‘채유럽오월민중

제’ 가 개최되었다. 미국에서는 세계기독교교회 조직을 통해 진상이 알려지고 재미 유학생을 중심으로 시위가 조직되었다. 또한 망명한 윤한봉은 현지에서 민족교육을 실천하고 한국 민주화운동을 지원하였다.

1990년 초 조직된 광주시민연대의 국제연대활동은 주목할 만한다. 이는 광주에서 시작된 국제연대 활동이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고립된 광주와 5.18을 자발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했다. 아르헨티나 인권활동가를 초청하고, ‘국제청년캠프’ 를 열었다.

‘5·18 특파원 리포트’ 기자초청을 조직하고 ‘아시아인권현장 선언대회’ 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99년에는 스리랑카 강제실종 희생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였다.

2000년대에는 5·18기념재단이 광주시민연대의 성과를 계승하였다. 5·18기념재단은 아시아 시민사회 주요 의제를 다루는 연례적 국제포럼을 발전시켰다. 또한 광주인권상, 5·18아카데미, 국제인턴사업, 국제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여러 시행 착오를 거치면서 일회적이고 전시적 사업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국제적 의제 관리를 통해 광주가 경험한 성과를 공유하고자 하였다. 5·18재단 국제연대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정적 재정 기반을 통해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축적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점차 자율성을 갖춘 성과를 이루었다. 이는 다소 제한적 조건과 인적자원이 동원된 1990년대 활동과 다른 점이지만, 시민 자발성 측면에서 1990년 활동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5·18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한 활동에 대해 개략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협력적 활동은 흔히 ‘국제연대 활동’, ‘국제협력 사업’ 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바꾸어 말해 ‘타국 시민과 정부에 영향을 주기 위한 민간 차원적 커뮤니케이션 활동’ 즉 ‘공공외교’ 가

지향하는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겠다.

2) 민주주의와 공공외교

초기 5.18 국제연대 활동, 다시 말해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시민 공공외교적 활동’은 ‘저항성의 연대’ 보다는 ‘교류 협력적 신뢰 관계 형성을 통한 지지자원 확보’ 차원의 접근에서 시혜적 차원의 개발 협력 성격으로 변화가 뚜렷했다. 이는 무엇보다 5·18 국제연대 추진배경에 ‘보편적 인권 담론’이 등장하면서 ‘추모와 의례’ 성격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시대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저항성과 운동적 지향성’이 점차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5·18에 대한 왜곡과 지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자원이 동원되면서 국제연대 활동도 이러한 요구에 일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2020년 홍콩과 태국에서 발생한 민주화요구 시위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위해 한국 사회가 반응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행동을 보면서 5.18 광주를 위해 이루어진 국제 시민사회의 ‘민주주의 공공외교’ 활동이 얼마나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사회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탄압받는 시민을 돋고, 국제사회가 보다 실질적인 관심과 행동에 나서도록 촉구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성소수자, 노동현실,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그 관심과 표현이 많지 않다. ‘민주주의 공공외교’ 적 활동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더 많이 책무성을 갖고 이를 돋는 것은 지금의 ‘5.18 광주’인 우리 자신을 돋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성취해온 민주주

의를 함께 공공연히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힘들게 저항하고 있는 또 다른 ‘오월광주’에 손을 내밀어 마음으로 ‘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민주주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협력 활동 즉 ‘민주주의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한국의 공공외교

토 론 문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1. 활동가가 느끼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

-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에 있어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배워야 할 대상.
- 노동운동을 넘어 촛불혁명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홍콩시위를 계기로 본격화 됨->영화의 힘!(택시 운전사, 변호인, 1987)
- 권위주의 정권, 군부의 독재와 학살에 맞서 광주와 87민주화 그리고 학살자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어떻게 한국의 청년들은 투쟁 해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함. (영문자료 요청)
- 글로벌 현상인 한국 대중가요와 한국 드라마 및 문화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아시아 지역 청년 세대에게 한국은 친숙하고 가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국가가 된 것은 맞음.

2. 한국 기업 문제

- 한국기업 문제. 대기업의 공급망에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한국기업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음. 임금체불과 노조탄압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식이 문제. 현지 공관과 정부가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
- 신남방정책특위에서 2019년 12월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후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
- 미얀마 군부와 연계된 한국기업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름. 이 문제에 있어서 미얀마 시민들은 한국정부와 시민들의 높은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한국기업이 과연 어떤 행동을 보일지에 대해 관심이 높음.
- 시민사회 입장에서 한국기업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의 법과 제도가 이를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홍보할 거리가 없음. 그나마 있는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연락사무소(NCP)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함.
- EU와 비교할 때, EU기업들이 설사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EU시민사회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정부가 이에 대한 법률 및 제도를 수립해놓고 있음. (독일 에버트 재단이 EU와 독일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행사를 조직하는 것이 공공외교)

3. 민주주의와 인권을 공공외교의 중심으로

- 미얀마 민주항쟁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방점을 찍고 대처

하는 것이 필요. 정부의 이런 대응 방향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기업에도 좋은 교훈이 될 것

- 일본과 중국은 할 수 없는 것. 일본의 말뿐인(때로는 부럽지만) 외교와 약한 시민 사회활동에 비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역동적으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연대하고 있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 최소한 정부에 이와 관련된 소통 채널이 필요함
- 홍콩 시위에서부터 최근의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연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청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청년들의 높은 관심이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부/공공기관/시민사회 영역에서 이어지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
- 초당적이고 범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될 필요성이 있고 충분히 가능함
- 중국의 노동운동/인권운동에도 광주가 힘이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운동에도 광주가 든든한 힘이 되는 것이 필요. 모든 억압과 폭력에 맞서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광주가 되기를 기대.



공공외교와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조영숙

양성평등대사

젠더교육플랫폼 효재 대표이사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Feminist Foreign Policy

2014

스웨덴 페미니
스트 외교정책
출범

2018

영국 노동당 페
미니스트 개발
정책 출범

2020

멕시코 페미니
스트 외교정책
출범



캐나다 페미니
스트 개발정책
출범

프랑스, 룩셈부
르크, 멕시코
페미니스트 외
교정책 선포

사례1) 2014 스웨덴 Feminist Foreign Policy

목표 1 :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도록

목표 2 :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롭게

목표 3 : 분쟁예방, 분쟁해결, 분쟁 후 평화 건설과정에 여성과 소녀들이 참여하도록

목표 4 : 여성과 소녀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 발휘하도록

목표 5 :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권리와 역량강화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목표 6 : 여성 및 소녀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보장되도록

목표 7 : 스웨덴 외교부는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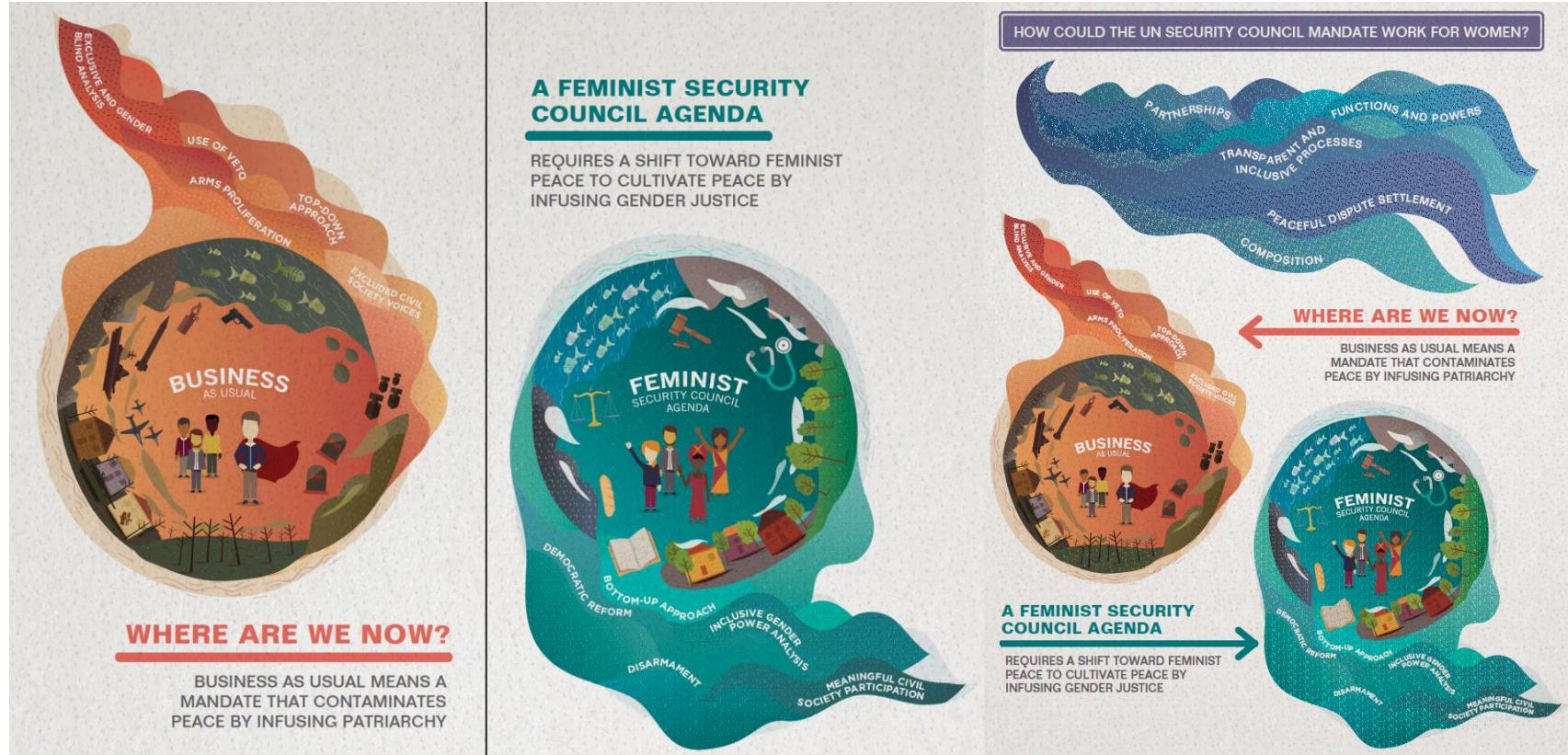
사례2) 2017 캐나다 페미니스트 국제개발정책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 캐나다 양자원조의 총액 중 15%를 성평등과 여성세력화 목표의 독자사업예산으로 배정
- 여성권리, 여성리더십, 성평등 활동 전개하는 NGOs에게 향후 5년간 1억5천만 캐나다달러 (약 1,362억) 배정
- 모든 원조사업에 반드시 성평등과 여성세력화 과제 포함 의무화. 만일 성평등 과제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을 시 사업추진 불가원칙



여성평화안보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의 확산



안보리 1325결의안의 4대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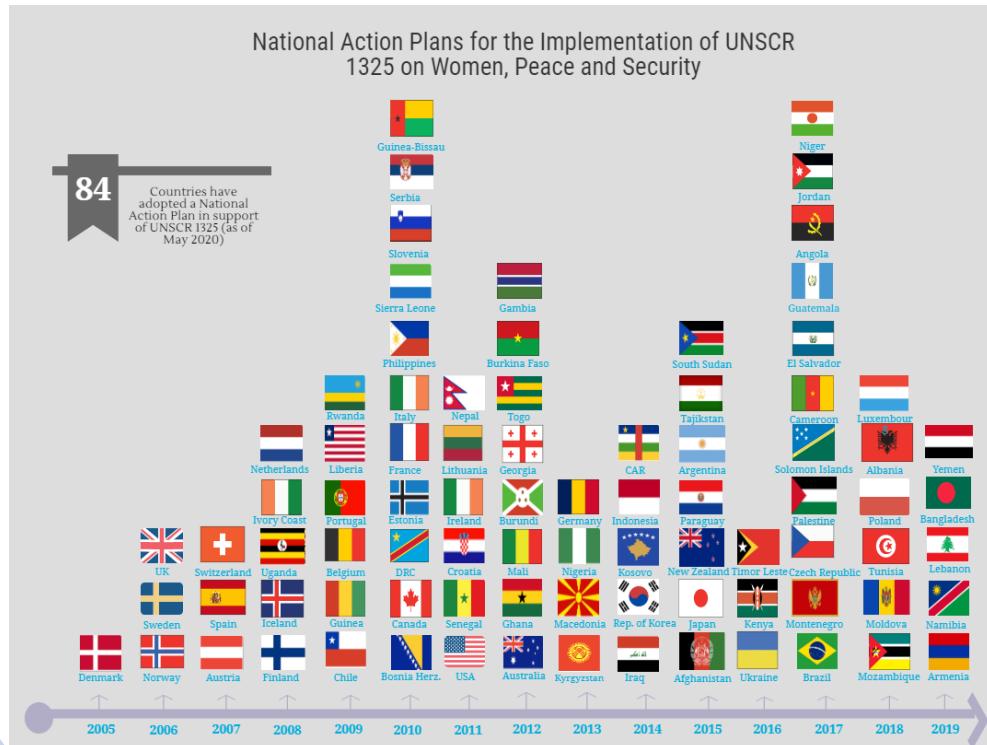
참여(participation):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을 촉구. 갈등의 예방, 관리 및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평화 협상,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게 제기.

보호(protection): 난민 캠프와 같이 긴급 상황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포함하여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GBV)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히 조치가 요구.

예방(prevention): 국제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개입 전략을 개선 할 것을 촉구. 국내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 여성 평화 운동 및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젠더를 고려한 접근(gendered approaches to reducing fragility)” 을 채택할 것을 요구.

구호 및 복구(relief and recovery): 난민 캠프의 민간인 및 인도주의 지원의 본질을 존중하고 난민 캠프 및 정착촌 설계에 여성과 소녀들의 필요를 고려하는 등 젠더 렌즈(gender lens)를 통해 국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 및 복구 조치의 발전을 촉구.

유엔 안보리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1325결의안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P)의 확산



- National Action Plans (NAPs): 전세계 84개국 (유엔회원국의 44%)
 - 28개국(33%)에서 이행예산 배정
 - 26개국(31%)에서 무장해제/군축 포함
 - 63개국(75%)에서 NAPs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명시 (자문에 머무르지 않도록)
 - Regional Action Plans (RAPs):
 - ECOWAS, African Union, European Union...
 - 아시아 7개국 NAPs 수립:
필리핀(2010), 네팔(2011),
인도네시아(2014), 한국(2014),
일본(2015), 동티모르(2016),
방글라데시(2019)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의 주요내용

No./Year	KEY ISSUES AND CORE PROVISIONS
1325 (2000)	➤ Representation & participation of women in peace and security governance; protection of women's rights and bodies in conflict & post-conflict situations.
1820 (2008)	➤ Protection of women from sexual violence in conflict; zero tolerance of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perpetrated by UN DPKO personnel.
1888 (2009)	➤ Creation of office of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Sexual Violence in Conflict (SViC); creation of interagency initiative "United Nations Action Against Sexual Violence in Conflict"; identification of "team of experts"; appointment of Women's Protection Advisors(WPA) to field missions.
1889 (2009)	➤ Need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women in peace and security governance at all levels; creation of global indicators to map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1960 (2010)	➤ Development of SViC monitoring, analysis, and reporting arrangements (gender-disaggregated baseline data on the impact of conflict, in particular in terms of sexual violence in conflict); integration of WPAs to field missions alongside Gender Advisors.
2106 (2013)	➤ Challenging impunity and lack of accountability for SViC.
2122 (2013)	➤ Identifies UN Women as key UN entity providing information and advice on participation of women in peace and security governance; whole-of-UN accountability; civil society inclusion; 2015 High-level Review of implementation of UNSCR 1325.
2242 (2015)	➤ Integrates WPS in all UNSC country situations; establishes Informal Experts Group on WPS; adds WPS considerations to sanctions committee deliberations; links WPS to countering terrorism and extremism.
2467 (2019)	➤ Strengthens prosecution/punishment for SViC; opens possibility for sanctions against perpetrators; affirms survivor-centered approach; calls for provision of reparations to survivors.
2493 (2019)	➤ Calls on member states to promote women's rights; encourages creation of safe operational environment for those working to promote women's rights; calls for full implementation of all previous WPS resolution

1325+20과 베이징+25 평가에서 제기된 여성평화 안보와 공공외교 과제

-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여성은 중재(mediation)책임자의 2%, 평화협상자(negotiators)의 8%에 불과, 특히 시리아, 예멘 등의 평화회담과정에서 여성은 완전히 배제되는 등 안보리1325결의안 이행 매우 저조. 그 결과 국가행동계획(NAP)의 이행 가속화를 위한 여성시민사회 참여의 실질화,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진행, 여성의 지위에 관한 국내 정책 추진, 분쟁 관련 성폭력 대응 강화가 요구됨. 단순한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닌, 근본원인을 해결하고, 구체적이고 지속적이며 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책임강화 측구: Women, Peace and Humanitarian Fund 등 시스템적 해결을 위한 투자 확대 요구.
- 1325 결의안 20주년을 맞이해서 UNWOMEN은 신속대응이 요구되는 6개 문제영역 제시
 - 1) 시민사회 및 여성인권옹호자의 보호 (protecting women human rights defenders and civil society)
 - 2) 여성평화안보 의제 대응 위한 재정 확대 (expanding financing for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 3)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참여 확대 (increasing the number of women in uniform)
 - 4) 분쟁회복 과정에 여성 경제력확보 촉진 (promoting women's economic recovery in post-conflict contexts)
 - 5) 성 인지적으로 표준화된 분쟁문제의 분석과 계획수립 (standardizing gender-responsive conflict analysis and planning)
 - 6) 젠더 포용적인 평화 과정 및 협상의 촉진 (promoting gender inclusive peace processes and negotiations)

인도적 지원 + 발전 + 평화의 통합

Humanitarian Action + Development + Peace NEXUS

- 장기화된 위기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잡하고 중복되는 결과를 안겨주고 있으며, 인도주의-발전-평화 사이의 상호연계 중요해짐.
-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기관과 사회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고 여성과 소녀를 이해 관계자와 변화의 주체로 권한을 부여해야.
 -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줄이고 복원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 인도주의-발전-평화 활동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현지의 주인의식을 보장하고, 민간 부문을 포함한 다른 이해 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집단적 성과를 달성해야.
 -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일하는 활동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 평등과 GBV 프로그램 및 옹호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 젠더 변환적인(gender transformative) 방식으로 설계되고 전달되어야 하며
 - 여성의 평화 협상, 안보 부문 개혁 및 분쟁 후 재건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촉진해야 함.
 -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옹호하면서 언제나 인도주의 원칙이 항상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함.

페미니스트 외교정책과 5.18정신의 연계

- 1) 공공외교에서 민주주의 의제가 왜 중요한가? → 성평등과 민주주의가 함께 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과 분쟁 양상의 문제점을 드러냄.
- 2) 한국 공공외교 정책과 사업은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 민주주의 증진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가? →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국제여성인권문제로의 보편화 과정에 한국여성운동의 기여가 지대함.
- 3) 민주주의/인권을 공공외교에 효과적으로 연계 및 주류화하는 방안은? → 성평등민주주의에 대한 주목이 필요함.
- 4) 5.18정신과 유산을 공공외교에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 보편적 민주주의/인권을 강조하는 시민정신에 기초한 민주주의/인권을 위해 싸우는 시민연대를 통한 공공외교의 확대
- 5) 미얀마 등 아시아 민주화에 한국(정부와 시민사회 등)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 할 것인가? → 민주주의/인권을 강조하는 시민연대 차원에서 국제연대 추진



민주주의와 한국의 공공외교: 말보다 행동

아이한 카디르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0AM KST (GMT+9) on Thursday 20 May 2021

Hybrid in Gwangju, South Korea

공공 외교

국제질서 유지
뒷받침 역할

- LIO 수호 vs. 자
유주의에 대한
도전
- 경쟁적이고 갈
등적인 공공외
교
 - (c.f. 냉전 공
공외교)

미국 공공외교 지원 프로그램 (말라위)

American culture/society

Improving teacher skills and child literacy

Women/girls empowerment

Preventing Gender-based violence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development

Democracy, transparency in governance,
and rule of law

Supporting and improving conditions for
vulnerable and marginalized citizens



RadioFreeEurope
RadioLiberty



Find out how we support social entrepreneurs through training, mentoring and funding, keep up to date with news and events, and find practical resources.



Governance and civil society

Find out how we promote community cohesion, including our Active Citizens training programme for community leaders.



Empowering women and girls

Read about our approach to tackling gender inequalities, with practical examples from our programmes, and find original research.



Our work in sport

Read about projects that help young people fulfil their potential through partnering with



Justice, security and the rule of law

Our work towards access to justice



스웨덴 인스티튜트의 학생 교류

- ODA
- 핵심: 동유럽
- 목표:
 - 공동안보 추진
 - 민주주의 문화 확대
 -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적 트랜지션 지원
 -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 활동:
 - 민주주의, 시장경제, 생태 개선 등 주제 우선
 - 자유시장경제로 트랜지션을 위한 교육

호주의 대외정책

- 글로벌 협력
-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인권, 법률 규범 촉진

캐나다의 글로벌 민주주의 촉진

시민사회 역량 강화

언론과 인터넷의 자유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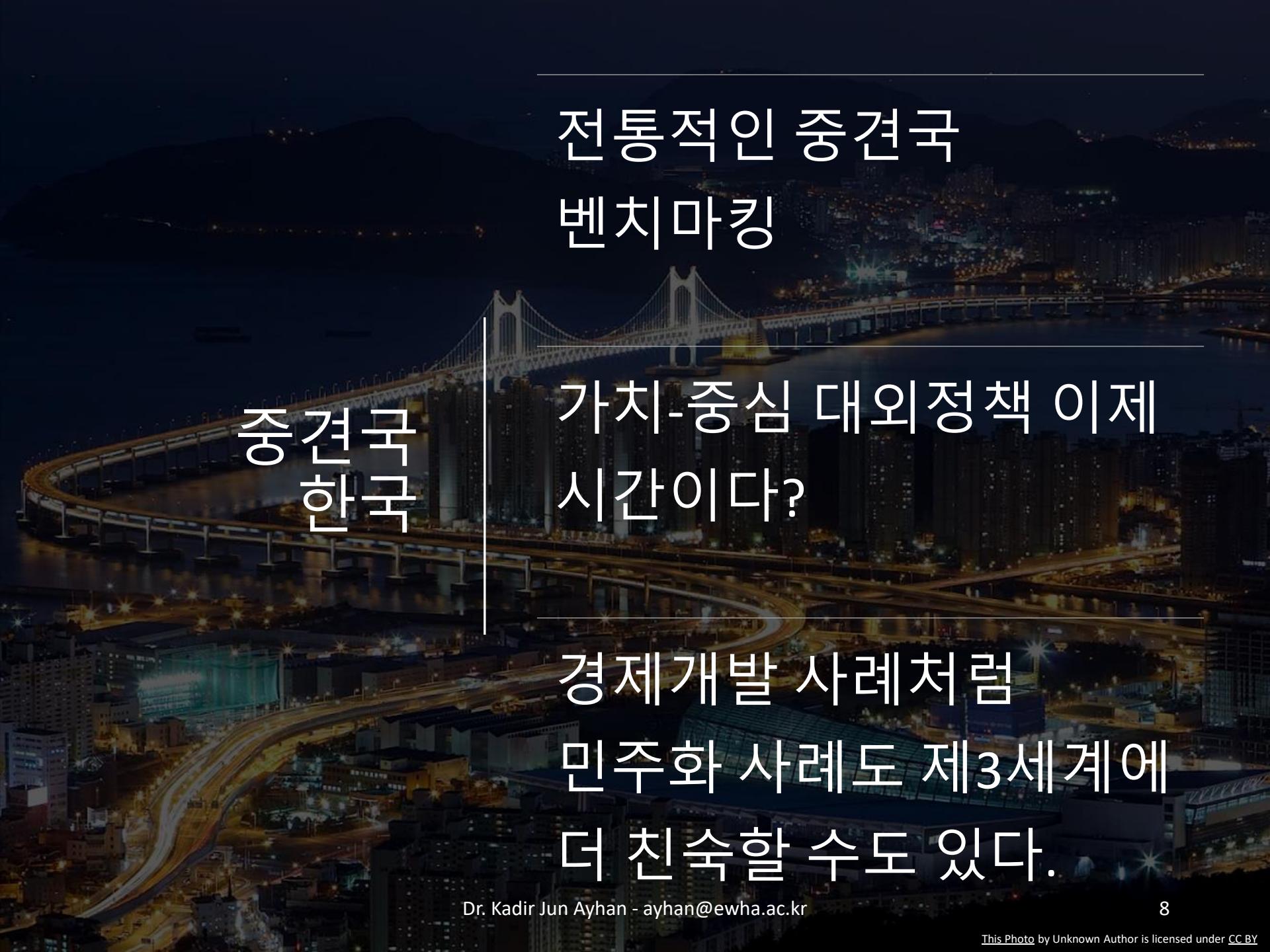
입법부-선거제도 지원

다당제 정치제도 강화

법률 규범 촉진

인권 보호 및 촉진

여성역량강화 및 정치참여 촉진



전통적인 중견국 벤치마킹

중견국
한국

가치-중심 대외정책 이제
시간이다?

경제개발 사례처럼
민주화 사례도 제3세계에
더 친숙할 수도 있다.

말보다 행동

헌신 (commitment)

- 유행? 계속 유지?

일관성 (consistency)

- 제멋대로 만만한 사례? 가치중심으로?
- 미안마뿐만? 다른 나라 탄압은?

잘난 체 피하기 (no patronizing)

- 가르침? 교류?

정의 (Justice) VS. 질서 (Order)

가치-중심 대외정책

- 민주주의: 자유주의 vs. 비자유주의
- 인간안보: 자주권 vs. 보호책임

중도적 가치

- 기후변화, 환경, SDGs 등

갈등 피하고 중도적 가치만
추구 가능한가?

Supplementary

- 참여연대 등 한국 NGO

Complementary

- 미국 정부 및 미국 NGO
(크로아티아 사례: see e.g.,
Taylor and Kent, 2013)

Conflictual

- Open Russia (see e.g.,
Popkova 2019, 2020)

시민사회 의 역할